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역사 전쟁, 남침과 북침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2013년 6월 11일, 서울신문은 진학사와 함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청소년 역사 인식'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6·25 전쟁을 북침으로 응답했다는 결과를 보도했다. 이전에도 남침·북침 논쟁은 있었지만 서울신문 여론조사가 마치 1차세계대전에서 '사라예보의 총성'과 같은 트리거(도화선,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조사 보도가 나가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시작된 남침·북침 역사 전쟁은 전교조 교사가 북침을 가르쳤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국사 교과서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인정하는 '검인정' 대신 국가 단일사관에 의한 '국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쟁으로 불붙었다.

8년이 지난 올 6월에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당시 서울신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보기 문항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6·25의 남침·북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선생님께서는 6·25전쟁이 남침이라 생각하십니까? 북침이라 생각하십니까?"로 물었는데, 남침이 54.5%, 북침이 33.9%, 기타 7.0%, 잘 모르겠다가 4.6%로 나왔다. 이어 질문을 달리 해서 물어 봤다. "그럼 용어가 혼란스러우시면 남한과 북한 중 누가 6·25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 90.7%였다.

2013년 당시에도 서울신문 조사가 잘못됐다는 반론 조사가 있었다. 교육전문지인 희망교육이 서울 지역 학생 1499명을 대상으로 '6·25 한국전쟁은 누가 일으켰나'라고 질문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남한이 일으켰다'라는 보기 문항을 제시한 것인데, 89.4%가 '북한이 일으켰다'고 답했다. 서울신문 조사 결과와 완전히 상반되게 나온 것이다.

즉 6·25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로 질문하면 다수는 전쟁을 일으킨 주체를 기준으로 북한이 침략한 '북침'으로 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에 조금만 고려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었다. 역사학자나 조사전문가들도 북침·남침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좌파 교육의 본보기로 보고 역사 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화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 여진은 한국 사회를 이념적으로 찢어 놓았다. 특히 교육계의 폐해는 더욱 컸다.

당시 고등학생들이 지금 20대로 2030세대 현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기여하고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도 참여해 이준석을 적극 지지했다. 만약 2030세대가 전교조 교사로부터 6·25는 '남한이 일으킨 북침'이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 좌파가 되었다면,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 다음 달에 32년 전 북침 논란이 됐던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전교조 결성 직전인 1989년 5월 제천 제원고교 강성호 교사가 수업 중에 북침을 주장했다는 사건으로, 학생 6명의 증인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그러나 강성호 교사는 북침을 가르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증인인 '6명의 학생 중 2명이 문제가 된 수업 시간에 결석했으며 우리는 북침설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359명의 당시 학생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사건이다.

정치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다 정당화된다고 보면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미래 세대의 교육까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정치가 교육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교육에 관여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교육에 관여를 한다면, 객관적 사실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서 그야말로 국가 100년 대계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용어 혼란이 너무나도 명백한 남침·북침 같은 잘못된 조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식의 역사 전쟁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마주 보기와 따라가기

최현열
광주 온교회 담임목사

어릴 적 많이 가지고 놀던 것들이 생각났다. 그중에서 참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자석이 있었다. 자석이라는 놈은 참으로 신기한 물건이었다. 몇 시간을 가지고 놀아도 질리지 않았다. 모래 속의 철가루를 모아서 책받침 위에 놓고 밑에 자석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 마치 철가루가 살아 있는 듯이 쭈뼛 서지를 않나, 자석을 움직이면 따라오면서 온갖 모양을 만들어 내지를 않나. 또한 S극과 N극이 끄트머리에 영어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막대자석은 파랑색과 빨강색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다. 같은 극을 마주하면 밀어내고 절대로 붙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극을 마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았다.

자석의 극과 극은 따로 떨어져 있는 몸이 아니다. 붙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영감을 준다. 우리 형제는 오남 삼녀로 꾀나 형제가 많은 편에 속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나 누나는 감히 근접할 수 없었고 두세 살 터울인 누나나 동생은 사소한 다툼이나 언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큰 것이 작은 것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며 혼내시곤 하셨다. 누구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는 자기의 고집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마주보고 씩씩거리는 것 아니겠는가? 내 생각이 맞고 자기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다. 이런 마주 보기의 결론은 부모님의 회초리나 벌서기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억지로라도 화해를 해야만 그 끝이 났다.

'양자택일' '흑백논리' '모 아니면 도'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런 말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나라 국민성은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이 많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이 많이 가는 말이다. 어떤 단체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중과 배려보다는 자기주장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마치 패배자가 된 것인 냥 그 분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다. 재미있는 일화 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참 엉뚱한 면이 있다. 꿈을 꾸어 놓고 꿈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해몽도 해내라고 신하들을 다그친다. 왕 앞에 나온 점쟁이들과 마법사들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어야 해몽을 할 것 아닙니까, 하며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한다. 하지만 왕은 그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시간만 끌려고 한다며 분한 나머지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바벨론의 다른 지혜 있는 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결국 다니엘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히고 그 꿈도 해몽해 주었다. 다니엘의 해몽으로 그 친구들과 다른 지혜자들의 목숨도 건질 수 있었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적이며 왕 앞에서 지혜를 다투어야 할 자들이고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물리쳐야 할 집단들이었지만 그 모두를 살려내는 능력을 발휘한다. 누구를 짓밟고 올라서거나 상대를 꺾어야만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주 보기를 잘못하여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를 통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 자석에는 양극이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이에게 존경을 표하듯,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 주는 이에게도 그 못지않은 존중이 필요하다.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신분의 선을 긋고 차별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성경에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담을 허신다"고 하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지쳐가는 이때 공교롭게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대립 또한 극명해져 모든 이들을 가슴 아프게 한다. 이 무더운 날에 얼음냉수같이 듣는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을 듣고 싶다.

기 고

도시의 품격, 도시 경관

김해경
남부대학교 초빙교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광주 지역 총 주택 수의 약 67%가 아파트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인 53%를 훌쩍 넘는다. 아파트 층수도 2016년 평균 13.6층에서 무려 33층으로 약 2.4배 높아졌다.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광주는 '아파트 숲'을 넘어 외부와 단절된 '아파트 장벽 도시'가 되어가는 듯하다.

전국의 부동산값이 들썩이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에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조망권, 일조권, 바람길 등 고층 아파트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시각적 부조화 등 도시 전체의 경관을 해치는 부작용은 결코 작지도, 적지도 않다.

도시 경관은 '도시라는 공간상에 만들어놓은 독특한 문화적, 기술적 경관'을 말한다. 예전에는 형태와 기능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의미와 상징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달리 말해 도시민들의 정체성이자 도시의 이미지라는 것이다. 파리, 런던, 뉴욕, 로마 등을 말할 때 떠오르는 개성적인 각각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경관이 또 하나의 도시 경쟁력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했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광주시는 2018년에 '2030 경관 계획'을 발표했다. '여유와 활력이 공존하는 품격을 지닌 문화경관 창조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송정역세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영산강, 무등산 등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왜 2021년의 광주는 '아파트 장벽 도시'가 되어가고 있나.

얼마 전 한 방송사가 광주의 고층 아파트 문제를 다룬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건축심의가 일관성이 없고 객관성도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설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에서는 모든 건물의 높이, 형태, 위치, 심지어 지붕 모양, 창문 위치, 벽면 재료까지 모두 도시 설계를 해놓는다'고 한다.

영국 런던은 도시 개발 지침 '런던 플랜'을 만들어 '도시, 강, 거리'라는 세 가지 조망으로 건물 높이를 규제한다. 덕분에 약 16㎞나 떨어진 리치몬드공원에서도 런던을 대표하는 세인트폴성당의 돔을 볼 수 있다. 특히 시장은 개발로 인해 압력을 받더라도 이 조망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 역시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전망탑이 동네의 조그만 공원에서도 잘 보이도록 조망축을 설정하여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도 공공디자인, 야경, 건축물 등 경관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발달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 도시들의 사정은 어떨까. 올 초부터 부산시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경관 지역의 대표 조망점을 지정해 건물 높이를 규제한다. 경관 훼손을 뒤늦게나마 막자는 취지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유엔(UN) 해비타트가 수여하는 '2020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그런 가운데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영종·송도 등 세 곳을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해 대대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후죽순 건립된 유사 건물들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더욱이 밤이 되면 암흑 도시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란다. 언론에 소개된 그 원인은, 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도시 경관에 무관심했고, 아파트 용지를 매각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가 입찰로 부지를 팔아 돈벌이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광주로 돌아와 보자. 바로 얼마 전에 광주시는 시의회에서 '고층 건물 난립을 막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40 도시 경관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했다. '2030 경관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그동안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 경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제는 도시의 품격을 따져야 할 때다. 부동산 개발 중심에서 도시 경관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이동시켜야 한다. 또한 법이 정한 경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시민들도 도시 경관은 함께 즐기는 공공재이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거 가치와 연결됨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시는 시장의 정치적 공약과 상관없이 런던 플랜처럼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광주만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담은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예향' 광주 시민이 만드는 도시 경관은 예술품처럼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社說

지역 간 불균형 초래 재정분권 정책 보완해야

오는 2023년부터는 전남도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4000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오히려 전남처럼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자치단체의 돈줄을 막는 역효과를 내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1단계(2019~2020년)는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방이양,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등이 핵심인데 이 중 균특회계 지방 이양이 논란이 된다.

정부는 균특회계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대신 국비 지원 시한을 3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국비가 끊기게 되는데, 전남도의 경우 그 규모가 연간 4000억 원이 넘는다. 이는 올해 전남도에 대한 전체 국비 지원(7조6671억 원)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옥죄게 된다. 균특회계로 받는 국비는 농어업 기반시설 및 상수도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는데 지원이 끊길 경우 농어촌과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 같은 농어촌 자치단체에 돈줄까지 마른다면 농어촌 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재정분권 1단계 시행으로 농어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게다가 재정분권 과실이 도시권에 집중된다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서야 되겠는가.

전남도는 3년으로 정한 균특회계의 국비 지원 시한을 없애고 영구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농어촌 자치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재정분권 정책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폭염에 사회적 약자 피해 없도록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연일 32도를 웃돌면서 어제까지 폭염특보가 일주일째 이어졌다.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인명 피해 예방 등 폭염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아홉 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스물네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광주의 경우 같은 기간 네 명의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8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폭염이 무려 10일째 이어지면서 100명을 웃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기도 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이제는 폭염도 자연재해로 규정, 방재 수준의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폭염에 의한 피해는 기상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히 다뤄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1901년에서 2008년까지 발생한 우리나라의 태풍·대설 등 모든 기상재해에 기인한 연간 사망자 수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폭염 대책 중 하나인 지자체의 특보 발령만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보다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택배 근로자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점검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야 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 냉방기기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이나 장애인들 역시 온열 질환의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의 경우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올림픽 유감

"진짜 열리기는 하는 거야?" 도쿄올림픽 개막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도쿄에서는 1000명, 일본 전체에서는 3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 절반이 "지금이라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할 만큼 분위기가 싸늘하다.

이번 올림픽은 무관중 대회로 열린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린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선수들은 당연히 악수나 포옹을 할 수 없고, 메달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에 걸어야 한다. 무관중 올림픽은 뜻하지 않게 응원석 욱일기를 퇴출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하지만 무관중은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만큼, 텅 빈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경기 수준 또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대회가 될 전망이다.

일찌감치 불참 선언을 한 네이마르와 음바페 등 축구 스타들은 물론 미국프로농구의 간판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도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최고의 흥행 카드로 꼽혔던 조코비치·나달·페더러의 테니스 '빅 3' 대결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세계 1위 더스틴 존슨 등의 불참으로 남자 골프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호주·중국·대만 야구팀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예선전부터 기권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29개 종목에 232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7개 이상 획득을 노린다. 태극전사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온갖 악재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일본 스가 내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간 협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유출하고,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도발로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도쿄는 지금 코로나 외에도 살인적인 폭염과 태풍·지진 등 안전을 위협하는 복병이 너무 많다. 금메달도 좋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선수단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한일전만큼은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